



“북서 사망한 국군포로에 ‘보수 미지급’ 규정, 위헌 아냐”

이슈판결

法 “관련 법률, 시행 당시 ‘생존’ 포로만 대상”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규정은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종)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부친 B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

가 돼 북한에 억류됐고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씨는 2005년 털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같은해 유전자검사와 판별을 통해 B씨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A씨는 ‘국군포로송환법’에 근거해 B씨가 사망 전 받아야 했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귀환 전 사망한 국군포로와 생환포로의 동등한 보수 지급은 불가능하다”

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절차를 마친 국군포로(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군포로였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억류지에서 사망한 사람은 보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국군포로송환법의 관련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오히려 북한에서 생을 마감한 포로가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았으므로

더 우대해야 하고 유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억류 보수 청구권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7년 시행됐고,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처럼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는 물론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지만 법 시행 전 사망한 귀환포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등록포로의 보수청구권 형성에 관한 법률조항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사망한 B씨는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관련 보수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상속 등을 원인으로 그 권리 를 지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3초에 한번’ 꼴 119구급신고 올렸다

소방청, 지난해 총 1156만7173건 접수

7차례 태풍 영향 구조·안전조치 신고↑

소방청은 2019년 한 해 동안 119 신고접수는 총 1156만 7173건으로 3초에 한번 꼴로 벨이 울렸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현장 출동인 화재, 구조, 구급, 생활 안전 신고 비율은 38%(437만 5325건)이며, 의료안내와 민원상담이 28.7%(332만 8167건), 무응답 및 오접속은 25%(289만 2490건)로 접계됐다.

2018년에 비해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실제 출동관련 신고는 1.2%(5만 3123건) 증가했고, 특히 구조와 생활안전 신고는 각각 8%(4만 6501건), 6%(4만 19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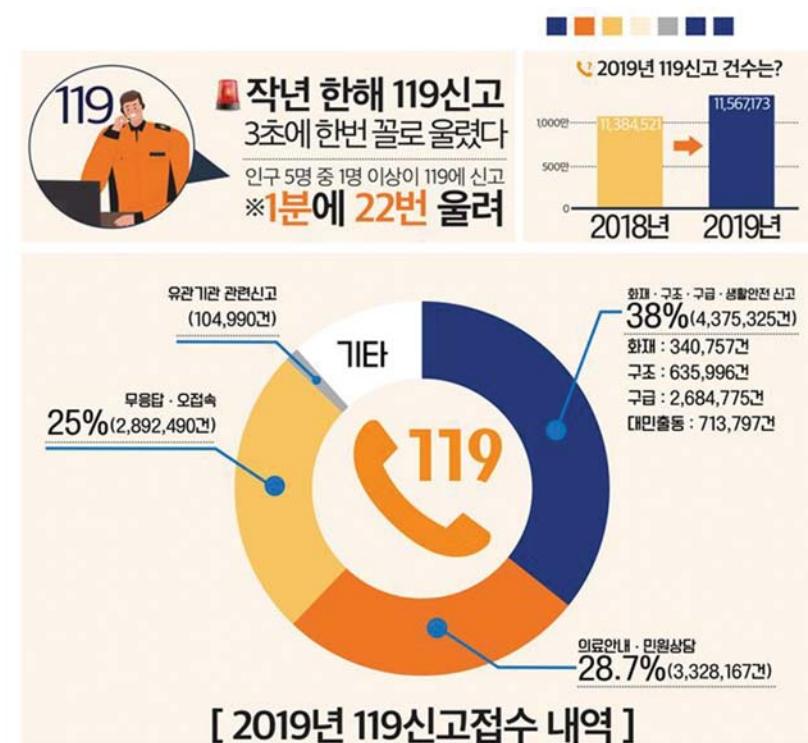
소방청은 3분기 태풍 ‘링링’을 포함해 한반도를 직접 강타한 7번

의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구조와 안전조치 관련 119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국 18개 시·도 지역별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울산지역이 가장 크게 늘어났고 다음으로는 경북지역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구조와 생활안전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울산지역 신고접수건수는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며 신고내역 중 구조신고 13.6%(2086건)와 생활안전 신고 26.2%(777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증가 폭이 큰 경북지역은 전년대비 6.6% 늘었으며 구조신고 24%(1만 1844건)와 생활안



전 신고 6.8%(5088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소방청은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출동 증감 사유와 지역별로 특

성을 보이는 요인 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예방정보 제공과 현장 대응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건의 병합 여부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들의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정합의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인이 중요해 합의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 앞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위헌적 폭거”

명문학군 쏠림현상 심화될 것”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성명서… 377개대 6100여명 참여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하고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 고 6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국 377개대 61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모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서열 해소·한 마디에 교육부가

국민적 의견수렴도 없이 마치 군사전처럼 밀실에서 이들 학교의 폐지 계획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다”며 “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조국사태에서 드러났듯 문재인정권의 독선, 탈법, 번취, 위선”이라며 “정부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을 국가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그만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조국 ‘가족비리 의혹’ 29일 첫 재판…정경심과 병합 논의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 없어…배우자 사건 병합 논의도



11개 법조 혐의가 적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재판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사건과 앞서 기소

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건의 병합 여부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들의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정합의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인이 중요해 합의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민족이

자폐치료 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IN
건강한 청년, 건강한 생활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 |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증기발견
자발치료 증인 민족군